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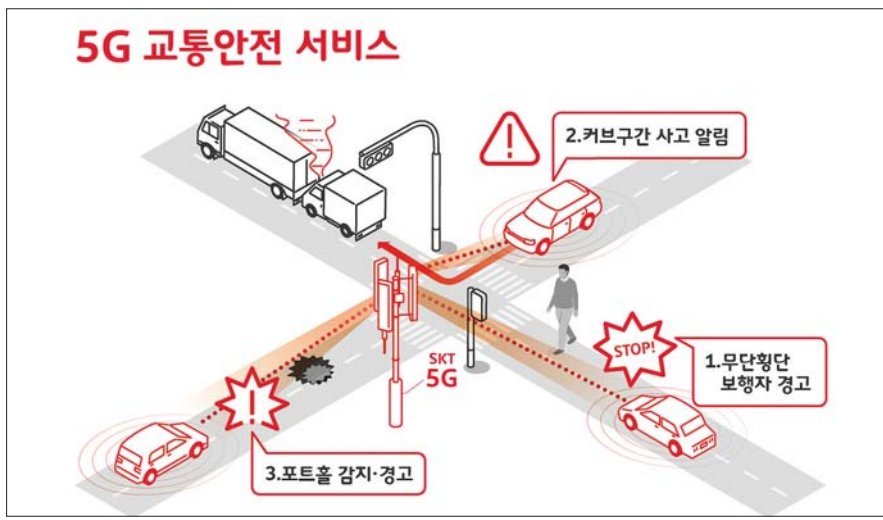
강남대로·통일로 등에 5G센서... 안전 교통체계 만든다

SKT·서울시, C-ITS 실증 추진
2020년 말까지 254억원 투입
자율차 주행 테스트베드 조성도

SK텔레콤은 서울시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C-ITS' 사업은 5G, 차량용 통신 기술 등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한 교통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서울 주요도로에 5G 센서·IoT 구축 ▲버스·택시 등에 5G 차량통신 단말 보급 ▲데이터 수집 및 안전정보 전달을 위한 5G관제센터 마련 ▲미래 교통 수단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포함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말까지다. 사업비는



/ SK텔레콤

약 254억원이다.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경인마포로, 통일로 등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및 도시고속도로 121.4km 구간이다.

이번 사업은 5G를 최초로 접목한 'C-ITS'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버스전용차선,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요 도로에 5G인

프라를 설치한다.

5G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인 차량용 5G 단말 2000여대를 버스, 택시, 교통신호 제어기 등에 공급하기도 한다. 5G V2X 기지국과 단말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5G버스·택시는 정류장·신호등 등과 수시로 대화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SK텔레콤과 서울시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파악 후 5G 차량에 경고를 전달한다. 또 'T맵'을 통해 일반 차량에도 교통 정보를 전달해 교통 사고를 줄인다.

아울러 SK텔레콤과 서울시는 서울 마포구 상암DMC 일대에 자율주행차량을 시범 운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올해 상반기에 조성한다.

테스트베드에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함께 달리게 된다. DMC 지하철역

과 주요 건물을 오가는 SK텔레콤 자율주행 차량은 이르면 6월부터 운행 예정이다.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긴다.

SK텔레콤은 5G, 자율주행 등 ICT기술센터에서 수년간 개발한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수주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1800만명이 쓰는 'T맵'을 통해 도로·요일·시간대·날씨별 빅데이터를 10년 이상 분석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조정밀지도'도 개발 중이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C-ITS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5G,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융합돼 있는 미래 사업"이라며 "당사가 가진 글로벌 최고 기술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서울 흥은동에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건립

10개동에 총 80세대, 연면적 5679㎡
내달 입주공고... 3월 완공, 6월 입주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80세대 규모의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이 들어선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인 청년가구 주거 빈곤율이 37.2%까지 치솟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서대문구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변되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은동 일대에 소셜믹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소셜믹스란 일반분양 가구와 장기전세 가구, 임대가구 등을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은 흥은동 산11-324 외 5필지 일대에 10개동(각 지하 1층~지상 5층) 80세대, 연면적 5679㎡ 규모로 지어진다. 공급 규모는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 16세대(2개동) ▲1인 청년가구 40세대(5개동) ▲신혼부부 24세대(3개동)이다. SH공사가 건물을 매입했다



흥은동에 들어서는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조감도. / 서대문구청

며 서대문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 관리·유지 업무를 맡는다.

층수를 올려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문 구청장은 "이번에 흥은동에 지어지는 공동체주택은 공원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다"며 "무작정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거주했던 흥은동 사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독립·민주유공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56㎡에 방 3개로 구성됐다. 청년이 사용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3~63㎡ 규모로 방의 개수에 따라 1~3명이 입주한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은 20년, 청년은 만 39세, 신혼부부는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구는 입주를 희망하는 독립유공자와 4·19, 5·18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후손을 개별 방문해 인터뷰와 생활실태 조사를 벌인다. 경제상태와 주거환경을 확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인 청년가구에 공급되는 40세대 중 10%는 서대문구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성년이 돼 퇴소한 이들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세대는 SH공사, LH공사 기준과 동일하게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은 3월 완공된다. 구는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6월 안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재산은 총 자산액 1억780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2545만원 이하(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여야 한다.

/ 김현정 기자 hjk1@

5호선 화곡역에 '청년주택' 57세대 공급

오는 2021년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57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에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강서구 화곡동에는 지하 2층~지상 11층 연면적 2726.27㎡ 규모의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 9세대, 민간임대 48세대 등 총 57세대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시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들어서는 청년주택 조감도. / 서울시

는 주차장 총 23면 중 10% 이상을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건물 북측과 동측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 가로

지하철역 350m 이내 '역세권' 3월 착공, 2021년부터 입주

활성화를 유도한다.

건축 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3월 착공한다. 2020년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21년 3월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화곡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축된 지구 사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기본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교육박람회 '신기한 로봇' 체험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6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코딩, 로봇, VR 등 에듀테크가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 기자재, 교구 등 미래 교육산업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16일(수) 개막되어 18일(금)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박람회를 찾은 어린이가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son@

경기도 1년간 화재 9632건... 전년비 167건 ↓

2018 경기도 화재발생현황 분석
하루평균 26.4건, 인명피해 1.6명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줄었으나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7일 발표한 '2018년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총 9632건의 화재가 발생해 61명의 사망자와 5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총 2,647억44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26.4건의 화

재가 발생해 1.6명의 인명피해와 7억 2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비해 2017년에는 9799건의 화재로 78명이 사망하고 57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 2503억2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둘을 비교해 보면 화재건수는 167건, 사망자 17명, 부상자 36명이 줄었으며, 재산피해는 144억2200만 원이 증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건수 감소 이유로 작년 초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3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출발한 119소방안전페트롤의 적극적인 활동과 범국가적 화재안전특별조사, 기초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예방활동과 홍보를 꼽았다.

/ 경기=김승열 기자 kmsy@

종로·세종로 등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

서울시, 총 336곳 중 313곳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된 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분류된다. 현재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

(폭 12m)에 총 336곳이 지정돼 있다. 총면적은 21.35㎢이며, 이는 시가지 면적의 5.75%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고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이다.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17.57㎢)에 달한다.

지역별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필요한 나머지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계획이다.

/ 김현정 기자